

소득주도 성장·남북경협 말씨름 ‘맥 빠진 국감’

反 대기업 정서·일자리 감소·통계청 외압 등

야, 현안마다 공세 ... 여, 자료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

국정감사 2주째

국정감사 2주 차에 접어든 15일 여야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 등 주요 국정 현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비롯한 비검임 14개 상임위가 모두 가동된 가운데 기획재정위는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을 상대로 청장 교체 외압 논란과 올해 1분기 가계동향 통계의 표본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올해 1분기 가계동향 통계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 표본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이 통계청장으로 부임한 것과 고용 부진 원인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첨예하게 부딪쳤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성장 잠재력을 꺾어 먹고 고용지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누적된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정무위의 공정거래위 국감에서는 대기업 규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반(反) 대기업 정서에 따른 규제가 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으며 공세를 취했고,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기조가 민생·경제 발전에 효율적이라고 맞섰다.

남북 경협도 핵심 이슈였다. 산림청 국감에서 민주당은 남북 산림협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도 꾸준히 추진돼 온 사업이

라며 사업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한국당은 실질적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지원 재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위의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외교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실패’로 규정짓고 비판의 날을 세웠지만, 한국당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인데 현 정부가 이전 정부에 대한 ‘적폐’ 프레임만 들이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국감에서는 지난 12일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합참의 비공개 보고내용을 공개한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반면, 한국당은 합참의 비공개 보고 중 군사

기밀이 아닌 내용을 공개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한편,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내 회의에서 국정감사와 일자리 대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의회에서 “보수야당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에 트집을 잡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이런 대책을 발표했는데, 보수정권도 가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세금을 퍼부었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단기 일자리는 한 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잡히는 점을 이용, 연말에 고용지표 개선을 끌어내려는 알뜰한 눈속임”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부의 무능과 민주당·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국감이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감 현장

“태양광 발전시설, 산림훼손 심각”

여야 “실태조사·안전 점검 나서야” 한목소리

국회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5일 산림청 국감정감사에서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에 따른 산림훼손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은 “도로와 철도, 건물, 축사 지붕 등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곳이 천지에 널렸는데 왜 숲을 파괴하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숲과 환경을 파괴해서 대체 어떤 친환경 에너지를 만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원전 1기 발전량인 171가와트를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여의도 140배가 넘는 면적을 태양광 시설로 촘촘히 도배해야 한다”며 “환경훼손은 말할 것도 없고 자가 상속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만 급급하고 산림훼손이나 안전성에 대한 산림청의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태양광 시설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성 점검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산림을 훼손해서 에너지를 얼마나 얻겠느냐. 산림청이 아니라 ‘산림파괴청’이라며 ‘산림훼손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재현 산림청장은 “당장 TF를 꾸려서 보존 산지나 공익 임지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못 하게 하는 방법 등을 소신을 갖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북 산림협력 문제를 놓고는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북한에서 산림협력을 공식 요청한 것이 없다고 하고, 산림협력이 유엔제재 상황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이라며 “왜 보여주기 식으로, 졸속으로, 안달이 나서 지원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진보·보수를 아울러 지속 추진돼온 만큼 일방적인 지원이라는 인식보다 상호 협력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남북 산림협력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동욱 기자 tuim@

“기상청이 구라청”

여야, 부실한 예보 능력 질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기상 예보 정확도가 떨어지는 데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신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국민이 많은 고생을 했다”며 “기상 이변일 수도 있지만, 폭염을 예측하고 국민에게 알려 대비하도록 하는 주무 부처인 기상청은 일을 제대로 못 했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월 말 한반도를 관통한 제19호 태풍 ‘솔릭’ 강도와 진로 예측이 틀린 점을 꼬집었다. 당시 기상청은 ‘솔릭’이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내다봤지만, 이후 태풍의 강도가 약해지고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직장과 학교가 불필요하게 휴업을 하는 등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특히 임 의원은 “기상청에 대한 국민의 평가 점수가 점점 박해지고 있다”며 “국민은 기상청을 ‘오보청’, ‘구라청’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오보, 오차는 죄송하다”면서도 “사실 장기 예보는 단기 예보와 달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김 청장은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상청은 끊임없이 장비 탓을 한다”며 “사과를 요구하지 잠시 망설이다 ‘오보청’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임동욱 기자 tuim@



“생전 뜻 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혜찬 대표와 제5대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된 유시민 전 장관이 15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 “정치 하는 일 다시 없을 것”

노무현 재단 신임 이사장 취임... 봉하마을 묘역 참배

노무현 재단 신임 이사장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했다.

유 신임 이사장은 이날 마포 노무현 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장 취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 사회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 대한민국 지도자로 국민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그는 특히 “앞으로도 글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려 한다”고 밝힌 뒤, “인명직 공직이 되거나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 재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날로 위원장 임기를 마감한 더불어민주당

주당 이혜찬 대표는 “활기찬 마음으로 재단을 유 작가에게 넘겨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유 작가는 2002년 선거부터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노 전 대통령의 가치를 가장 잘 실천하는 공직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 4년 동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아 온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직후 사임의사를 밝히고 후임으로 유 전 장관을 낙점, 직접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와 유 이사장은 이날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임동욱 기자 tuim@

손학규 “보수 통합? 웃기는 이야기”

“한국당은 청산 대상...바른미래 다음 총선서 2당 될 것”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자유한국당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세심할 것인지 지침도 하나 없이 통합만 이야기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통합하자는 것은 막말로 웃기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은 자기들 이야기부터 하지 왜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나. 한국당은 적폐청산 대상”이라며 “한국당은 통합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수정당이 모이는 것이 수구정당이 모이는 건가”라며 “박근혜를 만들고, 박근혜를 구속시킨 그런 정당과 어떻게 통합 이야기가 나오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원칙 변호사에게 미투지 말고 자기 책임 하에 당을 바꿔야 한다”며 “평론가 한 명 데려다 놓고 다 말기냐”고도 했다.

손 대표는 “우리 당에서 (한국당으로) 꼭 가야 할 사람 있으면 가라”며 “개

혁보수를 할 사람은 많다. 우리가 중심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중도개혁 정당으로서, 정치를 바꿔나갈 중심적 정당”이라며 “다음 총선에서 1당은 못 된다고 해도 2당이 돼서 다당제로 정치 구조를 바꾼 뒤 합의제 민주주의로 갈 것이다. 그것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또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9월 고용동향의 개선된 지표들은 단기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인한 ‘반짝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며 “문재인정부는 이 엄청난 경제 상황이 최악은 아니라고 한숨을 돌릴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경제철학을 바꿔야 한다”며 “장학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하고 실용적인 시장경제주의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통계지표를 일시적으로 개선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태’를 중단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성명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의 꿈과 행복한 삶을 위해”

광주시, 노동계 대타협을 통한 현대차 투자유치 사업 성공을 희망한다.

최근 광주형일자리의 첫모델인 광주시의 현대자동차의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사업이 지역 사회의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광주시와 노동계, 현대차와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로, 완성차공장의 성공을 바라는 광주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

지난 5월 31일 현대자동차가 광주광역시에 노사민정 대타협공동결의를 기반으로 빛그린국가 산업단지 내에 광주시가 주체가 돼 추진하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지속 창출사업”과 관련해 투자이행서를 제출하였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광주시와 함께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등이 함께 참여하여 완성차 공장의 설립·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우리지역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매우 절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운동 광주광역시협의회에서는 현대차 광주완성공장 참여 의향 발표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정성 있고 열린 자세로 노사민정의 대타협의 노고에 대해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광주시와 노동계의 소통부족을 이유로 지역내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앞으로 광주시는 현대자동차, 노동계와 새로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고 조정 중재를 함으로써 광주형 일자리가 반드시 성공하여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고 지지를 보낸다.

2018년 10월 15일
바르게살기운동 광주광역시협의회 구제길 회장의 회원 일동